

독자권익위원 칼럼

박봉순

독자권익위원
동신대학교 지역협력본부장



전남에는 참으로 맛있는 것이 많다. 음식이 그렇고, 풍경이 그렇고, 사람살이의 문화도 그러하다. 맛있는 것은 단순히 입에 즐겁다는 뜻만은 아닐 것이다. 그 속엔 땅의 향기와 바람의 기억, 그리고 사람의 손끝이 녹아 있다.

전남 음식이 맛있는 이유는 복잡적이다. '한국의 곡창 지대'라 불리는 만큼 비옥한 토양과 지리적 여건, 풍부한 일조량은 쌀·채소·과일 등 각종 농산물의 생장을 도운다. 게다가 서해와 남해를 접한 리아스식 해안과 미네랄이 풍부한 갯벌은 신선하고 질 좋은 해산물의 보고가 된다. 좋은 재료가 기본이고, 그에 더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조리법과 손맛이 어우러져니 어찌 맛이 없겠는가.

남해안의 생선은 동해안의 생선보다 맛이 깊고 찰지다. 입맛 까다로운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아차린다. 낚시 하나만 봐도 그렇다. 물속에서 자란 꽃나자와, 뽕에서 각종 미생물과 갑각류를 먹고 자란 빨낙지는 식감과 풍미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남도에는 오미(五味)가 있다. 들녘에서 자란 벼가 전하는 단맛, 인동초의 씹쓸한 쓴맛, 구래 산수유와 청량한 신맛, 천일염이 전하는 짠맛, 그리고 옛기락 속 구수한 맛. 단

전남은 참 맛있다

맛, 쓴맛, 신맛, 짠맛, 구수한 맛이 전남의 음식과 문화 속에 녹아 있다. 남도의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한국 식문화의 뿌리로 작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음식은 깊은 맛과 풍부한 영양을 지녔다. 오랜 시간 숙성된 장, 발효를 거친 젓갈과 간장, 양념 하나에도 정성과 시간이 담겼다. 재료만이 아니라 조리 과정 하나하나에도 혼이 실린다. 그리하여 참맛이 된다.

전남의 젓줄인 영산강을 따라 7개 시·군이 펼쳐져 있다. 담양에서 시작해 화순, 나주, 함평, 무안, 영암, 목포까지. 그 강을 따라 전남의 음식문화도 흐른다.

담양은 대나무의 고장이다. 대통밥과 죽순요리는 담양의 상징이다. 화순은 콩이 주인공이다. 흑두부, 콩비지, 사평천 다슬기로 끓인 수제비와 된장찌개는 밥상을 채운다. 나주는 영산포 홍어의 본향이다.

신안 흑산면 영산도에서 이름을 얻은 홍어는 사흘을 거쳐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나주곰탕은 미군정 시절 소고기를 근남한 뒤 남은 부숙고기를 활용한 것이 시초로 전해진다.

함평은 함평천지의 들녘에서 나는 찰진 쌀 위에 생고기를 얹어 비린 장터 유희비빔밥이 유명하다. 무안은 세발낙지의 고장이다. 망은 탄저만 갯벌에서 잡은 낙지를 활용한 탕탕이, 호풍, 초무침 등이 대표적이다.

영암은 영산강 하구의 기수역에 위치해 승어, 장어가 특산이다. 승어알로 만든 어란은 조선시대 임금님의 진상품으로도 올랐다. 지금은 허균덕으로 인해 어족 자원이 줄었지만, 그 명성은 여전하다.

이제는 농경지 보전만이 능사가 아니다. 강물의 흐름이 막히면 생태계도, 식문화도 고립된다. 다양한 어종이 만물

과 해수를 오가며 생태계를 복원하고, 요트가 유행하 흐르는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가 오기를 기대해본다.

목포는 전남 농산물과 수산물이 집결하는 '맛의 집산지'다. 여기서 남도의 백반 문화가 시작됐다. 30여가지 반찬이 한 상 가득 오르는 남도 백반은 어느 도시에서도 보기 어려운 가성비와 정성이 담겨 있다. 이 남도 백반이 오늘날 한정식의 원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남을 출장지로 찾는 타지역 공무원이나 기업인들 중에는 "값싸고 푸짐하게 잘 먹을 수 있어서"라는 이유를 드는 이들도 많다.

맛은 결국 문화다. 전남에는 수많은 문화들이 스며 있다. 유배 문화, 선비 문화, 농업 문화, 한의 문화, 수목화와 남종화, 섬의 문화, 판소리와 예술, 의병과 이순신 장군의 정신까지. 전남은 오래된 문화의 향기가 자연과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이 각기 다른 문화들은 각기 다른 '맛'을 품고 있다. 삶은 단맛만이 전부 아니다. 때로는 쓴맛도, 신맛도, 짠맛도 있다. 전남의 문화와 음식을 음미하다 보면, 그 모든 맛이 어우러져 신비롭고 절묘한 조화의 향연을 이룬다.

AI에게 물어본다. '전남의 맛과 멋은 무엇이고, 어떤 냄새가 나는가?'

아마도 AI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해남 해장 막걸리 한 사발에 흑산 홍어무침을 안주 삼고,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천사의 섬 신안으로 뱃놀이 떠난다면 이보다 더 맛있고 멋진 곳이 또 있을까.' 전남은 정말 맛있는 곳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고

석성민

헬스개발 사업본부장



마약 청정국이던 대한민국에서의 마약 문제는 이제 심각 단계를 넘어가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격한 형사처벌이 이뤄짐에도 그 수치는 줄지 않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히 복응과 투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대검찰청의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 사범(2023년 기준)은 총 2만7611명으로 2010년 대비 184% 증가했고, 이 중 10대와 20대의 마약류 사범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단독 마약사범은 20대 32.1%, 30대 27.7%, 10대 3.4%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여성 비율도 32.3%로 조사됐다.

정부는 그동안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정보공유·공동 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마약사범은 지난해 2만3022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했던 전년도 2만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명을 상회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10~30대의 청년층에서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온라인 플랫폼과 비대면 방식을 통해 더욱 은밀하고 지능화된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전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대한민국

대응이 필요하다.

덧붙여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범죄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2339명의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단속, 2012년 대비 약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음지에서 단속 투약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마약 수요에 맞게 밀수·밀매와 같은 중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 밖에 환자의 통증관리와 특정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마약류를 불법으로 확보해 오남용하는 등의 의료 목적 외 사용을 하는 행위까지 늘어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종합병원 등에서는 자체적인 '마약류 관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도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경우, 국내 반입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5년간 이러한 불법 의약품의 반입이 43배 증가했으며, 관세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이러한 해외 발 의약품 마약류에 대한 예방 활동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대응으로는 밀수 마약에 대한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중요하다.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을 포함해 전체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지난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 국경 단계에서의 적발을 피하고자 밀수 기법도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 방식 또한 효과적인 방법을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4년 상반기에 압수된 코카인은 65.26kg으로, 2023년 상반기(6kg) 대비 약 989% 증가했고, 케타민, 대마초 등

의 압수량도 증가했다.

마약의 확산도 문제인데 재범률도 문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확산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마약 재범자 중 3년 이내에 재검거된 사람은 전체의 81.5%를 차지했다.

대부분 마약류 사범은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해 돌이킬 수 없는 굴레에 빠지게 된다.

정신적인 삶으로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서야 마약의 늪으로 깊게 빠졌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이미 마약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 그 늪은 오히려 생명수와 같기 때문에 마약 확산 방지만큼이나 재활치료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되 이에 후속적인 재활치료에서만큼 '약물에 의한 환자'라는 시각과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해야 한다.

또 보다 은밀해지는 온라인 거래, 비대면 확산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시민사회에서도 보육주거 식 방범 활동에서 더 나아가 도박, 보이스피싱, 스톱 등과 같은 신종 범죄들이 사회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 국민적 '공동 예방 활동'에 관심과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신종 범죄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한 체대를 세밀하게 분리해 중점적인 예방 활동을 통한 것이나 유일한 해결책이며, 개인과 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내 가족, 병병했던 내 동료가 이러한 중대범죄에 노출됐다는 경각심을 잃지 않는 자세도 중요하다.

취재수첩

지방소멸의 해답, 곡성에 있다

이승훈

지역사회부 부장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국내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한다. 특히 농촌과 중소도시는 젊은층의 이탈과 저출산으로 인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일자리가 줄고, 학교가 사라지며, 병원조차 운영이 힘들다. 이제 지방소멸은 추상적 우려가 아니라 당장 눈앞의 현실이 됐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곡성군이 눈길을 끄는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일명 '워케이션(Workation)'이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형 인구 유입 전략이다. 일(work)과 휴식(vacation)을 병행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도시에서 탈피해 지방에서 일하고 머무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다.

곡성군이 운영하는 '워크빌리지 곡성 시즌3'는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 공모사업에 선정돼 본격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184개 기업, 1100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들 중 98%가 재방문 의사를 밝힐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무엇보다 이 실험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체험이나 관광이 아닌 도시와 농촌, 일과 쉼, 체류와 정주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점이다.

곡성군은 수도권 중심의 노동 환경에서 벗어나 기업과 개인이 지역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기업 대상의 워크케이션 프로그램과 더불어 디자이너·프리랜서·작가 등을 위한 '포레스트 캠프'도 병행 운영 중이다. 참가자들은 5박 6일간 자연 속에서 집중 근무와 지역 교류를 병행한다. 이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경험이다.

특히 곡성군은 단기 체류자를 넘어 지역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주민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삼기면 일대에 조성 중인 '리스타이언'과 '지역활력타운'은 그 연장선이다. 단기 체류형 워크케이션에서 나아가 정주 기반을 갖춘 일자리 중심의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하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새로운 진화할 만하다.

수도권 집중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지방은 더 이상 '떠나는 곳'이 아닌 '살아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일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우리가 지역을, 자연을, 공동체를 삶의 일부로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지방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되살리는 일일 것이다. 곡성이 그 문을 먼저 열고 있다.

사설

정부 2차 추경에 광주 'AI 2단계' 반영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경 예산 편성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이번 추경에 지역 현안인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2단계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광주시는 인프라-기업-인재로 이어지는 AI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광역자치단체중 최초로 인공지능산업육성과 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한데 이어 2023년에는 인공지능산업육성 인공지능산업실로 승격시키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AI사업에 올인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4000억 원을 투입해 국가AI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집적단지를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 AX실증단지를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기로 했다.

여기서 AX는 AI 전환, 또는 A·I·Transformation을 나타내는 용어로 기업이나 조직이 AI를 일부 분야에서 단순히 활용하는 것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은 물론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적용해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한다. AX는 AI가 전 분야에 활용되는 미래 디지털 경제시대에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사업은 올해부터 차질을 빚었다. 광주시가 지난해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 957억원을 요청했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는 1단계 사업과 예산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에서야 정부 1차 추경에 153억원이 반영돼 절반가량 가동이 멈춰 있는 컴퓨팅 자원이 가동되며 사업을 지속했지만 말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인공지능산업육성 중심으로 AI융합사업단과 인공지능산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AX실증센터, 국가AI 컴퓨팅센터 유지, AI창업캠프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광주시의 이같은 노력이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방향에 담겨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전국 최초 '전남 외국인 안심병원' 성공하길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전남 외국인 안심병원'을 운영한다고 한다. 이는 외국인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실 전남도는 외국인 주민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곳이다. 2023년 기준 외국인주민은 8만6729명으로 2022년(7만3183명) 대비, 18.5%가 증가해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다.

이 때문에 외국인 대상 의료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은 진료비 부담이 크고 언어 장벽으로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얘기가.

이에 전남도가 전남도의사회와 협력해 이달부터 외국인 안심병원을 지정·운영키로 한 것이다.

지정받은 병원은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에게 진료비의 약 30%를 감면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남 외국인 통합지원 콜센터와 연계해 의료 통역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어를 포함해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등 6개 언어로 운영 중인데 다음달부터는 태국어, 우즈베크어, 스리랑카어, 필리핀어 등도 확대키로 했다.

전남지역 의료기관이 안심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전남도는 지정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지정서를 발급한다. 도의사회는 진료비 감면 확인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전남도는 예전부터 외국인 주민들에 대해 공을 들였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이민 등의 전담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고 지역 주도의 외국인·이민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전남형 이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산업수요에 기반한 이민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도 했다.

지난 1월에는 대불국가산단에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 기관인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조만간 전남 동부권에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남 외국인 안심병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10 경제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사진부 370-7050	논설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원문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광남)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